# 광주시, 상생형 근로복지기금 58억 조성

### 제1차 노사민정협의회 개최
### 근로자 생활 안정·복지 증진
### 강 시장 "다양한 현장 목소리 포괄적 노동의제 다룰 협의체도"

전국 최초로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를 설립한 광주시가 후속 조치로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상생형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한다.

광주시는 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3년 제1차 노사민정협의회'를 열어 상생형 지역일자리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계획을 의결했다.

강기정 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김봉길 광주경영자총협회장, 서연우 광주여성노동자회장, 박미경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황종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등 각 분야 노사민정 위원 26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회의부터는 배달노동자, 플랫폼택시 등 고용형태의 다변화에 따른 취약 노동자 계층을 대표할 위원 4명을 추가 위촉, 보다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위원들은 전국 제1호 노사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와 협력 중소기업 근로자의 실질적 복지 증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가칭)상생형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기금 조성 계획안을 최종 의결했다.

상생형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그동안 참여기업 발굴, 근로복지공단 컨설팅,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등을 진행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복지 격차에 따른 처우 개선을 위해 2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 출연해 기금을 조성하고, 이 기금을 취약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활용하는 제도다.

이번 상생형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광주글로벌모터스(GGM)와 지역 중소기업이 기금법인을 구성해 출연한 금액에, 국가와 지자체가 일정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해 조성하게 된다. 이를 통해 사회적 임금을 확대하고 근로자 복지를 증진시킬 계획이다.

지난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생형 중견기업이 지원 대상으로 확대된 이후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이 지역 중소기업과 함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광주시가 전국 최초 사례다.

예상 기금 규모는 총 58억6000만원(기업 20억원·시비 20억원·국비 18억6000만원)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기금 출연과 지원금 신청이 완료되면 하반기부터 3개 기업, 750여 명의 근로자들이 5년간 문화·체육·의료 분야 등에서 혜택을 받게 된다.

강기정 시장은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환경 변화에 따라 노동의 대표성을 더욱 확대하고 포괄적 노동의 제까지 다룰 수 있는 노사민정협의회를 제안했다"며 "이번에 신규위원 위촉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게 됐다. 다양한 노동의제, 고용형태 다변화에 적극 대응해 선제적 노동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지혜를 모아 달라"고 말했다.

박상지 기자 sangji.park@jnilbo.com

## 민주 광주시당 "광주시 농민공익수당 조례 환영"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농민들의 염원 중 하나이던 '광주시 농민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이 통과된 데 대해 환영을 뜻을 밝혔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7일 논평을 통해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고 식량 주권, 안보의 기초가 되는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인정한 결정을 높이 평가하고, 특히 전국 특·광역시 중 최초로 농업인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 점을 주목한다"고 밝혔다.

또 "농민수당 지급을 주요 공약으로 채택해 본격화한 민선 8기 강기정 시장과 조례안을 통과시킨 광주시의회, 정책에 동의한 5개 자치구에도 감사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의 농업은 식량 안보와 기후위기시대 환경보전,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초가 되는 산업으로 세계는 농업·농촌의 가치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고부가가치 산업에 밀려 관심에서 멀어져 있던 농업의 중요한 가치를 보존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정책 발굴과 실행에 힘쓸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부터 8000여 농가, 3만5000여 농업인에게 연간 60만원 상당의 농민공익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라며 "치솟는 물가와 유가 상승 등으로 농업생산비용 부담이 농가를 짓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인들이 겪는 위기를 극복할 응원금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해나 기자

**서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위촉**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이 7일 서구청 이음홀에서 '이웃이 이웃을 찾고, 돕고, 살피는 내곁의 수호천사' 제5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위촉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 서구 제공

## 박수기 시의원, 대일항쟁기 유적 발굴·관리 조례 제정

광주 지역 대일항쟁기 유적 발굴과 보존·관리를 골자로 한 조례가 7일 제정됐다.

박수기 광주시의원(광산구5·사진)은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화정동, 쌍촌동 등 광주 도심 곳곳에서 발견된 일제 군사시설물을 대일항쟁기 유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역사적 교훈을 기억하고 이를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대일항쟁기 유적의 정의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유적 발굴·보존·관리사업 실시 △경비 지원 △위원회 구성·운영 등이다.

박 의원은 "일제의 전쟁 야욕과 강제동원, 인권유린의 참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라며 "이 조례를 기반으로 무관심 속에 방치된 대일항쟁 유적이 역사문화적 자산으로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나아가 다크투어리즘 등 관광자원의 일환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 전남도 "군공항 이전, 정부 획기적 인센티브 선행돼야"

### 박원종 의원 "도, 소극행정 안돼"

전남 일부 지역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에 따른 설명회가 개최되면서 주민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는 정부의 획기적인 인센티브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원종 전남도의원(영광1·사진)은 7일 열린 도의회 임시회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군공항 이전 관련해 여러 지역에서 찬·반 의견으로 민심이 흔들리고 있으나, 전남도가 너무 지켜보고만 있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전남지역 군공항 후보지 외에 최근 함평과 영광에서도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며 "전남도가 갈등 관리 협의체를 가동하든지 해야 한다"며 "전남도가 소극적으로 행정을 하면 지역의 갈등이 더 심화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전남도는 광주 군공항을 전남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정부 인센티브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일부 지역에서 나오는 얘기는 논의 초기 수준으로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다"며 "지역 수용성을 감안해 정부에서 획기적인 방안을 선제시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최황지 기자

전남일보 페이스북 facebook.com/jnilbo

## 전남도, 올 9456억 규모 사업발주… 경제활성화 기대

### 상반기 96% 9110억원 규모
### 입찰시 지역업체 참여 보장

전남도가 올해 9000억원 규모의 사업 발주를 통해 지역경제에 훈풍을 불어 넣는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 상반기에 96%를 발주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계약업무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2023년 9456억원 규모의 사업 발주계획을 전남도 누리집과 나라장터에 공개하고 지역 업체 참여를 적극 보장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발주 금액은 지난해 8722억원보다 734억원이 늘어났다. 분야별로 공사 8373억원, 용역 728억원, 물품 355억원이다.

공개 내용은 사업 명칭, 발주 물량, 예산액, 발주 방법 등이다.

발주 사업은 광양 옥곡천 하천재해예방사업 441억원, 보성 조성천 하천 재해예방사업 425억원, 무안~몽탄 지방도 확포장공사 202억원 등 934건으로 상반기에 96%인 9110억원을 발주한다.

또 22개 시·군 발주계획 규모도 지난해보다 5071억원이 증가한 3조1859억원에 달한다.

전남도는 해당 발주건도 각 시·군 누리집에 공개하고 상반기에 집중 발주키로 했다.

이천영 전남도 회계과장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지역 업체를 위해 각종 계약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지역 업체 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해 공사 입찰 시 지역 업체 49% 이상 공동도급과 공사 하도급 시 지역 업체 70% 이상 참여를 보장키로 했다.

물품 구매 시 도내 생산업체 우선구매와 적격심사 시 지역 업체 참여율에 따른 가점 부여 등도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020년부터 한시 운영했던 계약보증금·입찰보증금 요율 인하 등도 오는 6월 말까지 연장 시행한다.

최황지 기자

## 전남도, 해양수산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 16일까지 '투자센터 수혜기업' '아이템 경진대회' 참가자 모집

전남도가 해양수산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전남도는 오는 16일까지 '전남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 수혜기업'과 '해양수산창업아이템경진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전남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 수혜기업' 신청 대상은 전남지역 해양수산 분야 예비 창업자와 해양수산 기업으로 관련 공모전과 아카데미 우수 수료자는 등급별 가점이 주어진다.

'해양수산창업아이템 경진대회'는 전남 해양수산 예비 창업자 또는 2023년 신규 창업자다.

두 사업 모두 16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완도읍 농공단지 4길 21-7,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전자우편(jmbic1726@naver.com)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전남도는 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를 통해 도내 해양수산 기업과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신규 창업 지원, 간편식 개발, 투자유치 역량 강화, 전문가 기술교육 등 14개 성장 단계별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공개 모집한 수혜 기업 40곳과 창업아이템경진대회 수상 기업 4곳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기업별로 최대 3500만원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www.jeonnam.go.kr), 해양바이오연구센터(www.jmbic.or.kr),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www.mokpoabo.kr)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 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를 통해 42개사를 선정·지원했다.

최황지 기자